

민주, 경찰국 신설 전면전 '화력집중'

TF, 당 기구로 격상 전열 정비 행안위서 대통령령 적법성 검증 윤희근 청문회 파상 공세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에 전면전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어 공세에 나설 태세다.

경찰 출신 인사의 요직 등용에 이어 경찰국 신설까지 이뤄지면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공안통치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권력기관이 정권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경찰국 신설을 두고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 직접 사법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 간섭을 열어놓기 위한 무서운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정권의 경찰 장악의 도로 규정하고 당장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열부터 정비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라며 "경찰 장악 관련 기구를 TF(태스크포스) 수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경찰 장악 시도에 대한 입장 및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에서 당 차원 기구로 격상시키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그간 TF로 구성돼 있던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을 당의 공식기구인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로 재편하

는 안을 의결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추진에 반대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쿠테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상황에서 민

주당 역시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수준을 높일 셈이다.

조오섭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독재로 회귀하더라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은 반

드시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며 "민주주의 후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책단을 중심으로 소관 상임위원 행안위에서부터 단계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행안위에서 대통령령인 경찰국 신설 관련 직제안의 적법성부터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법 제98조 2항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창에 따르면 상임위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해당 대통령령이 법률의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검토 경과 등을 보고해서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본회의 의결로 정부에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이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 구성 결과 국민의힘이 행안위원장을 맡은 상황에서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은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윤 후보자의 소신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의 참석자 징계의 부당성 등과 관련한 여론전의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당 일각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 카드도 거론되지만, 이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이상민 "개별적 경찰수사 지휘 생각없다"

"류삼영 징계, 직무권한 아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 징계와 관련해 "제 직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류 총경을 징계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테타'에 준한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

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수사에 간섭·통제하려는 것 의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만드는 경찰국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경찰관 지휘 규칙을 실제로 보면 그런 우려는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안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사에 관여하거나 지휘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지휘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수사에 개입·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휘권자의 해산 명령을 위배한 건 명백한 불법 행위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회의 주도 세력에 대해선 "집착이 가는 것은 있다"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언론 취재나 경찰 내부 감찰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 한일 고위급 국방회의체 복원 추진

정부가 일본과 초계기 사건 이후 4년 가까이 중단된 고위급 국방정책회의체 복원에 나선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2018년 말 이후 사실상 중단된 국장급 정책실무회의를 복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화로 가는 데 장애물이 있다면 그

러한 것도 다시 검토하는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일 외교관계 개선 노력과 함께 국방 및 군 회의체 정상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국방부는 이달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방부와 각군이 일본과 고위급 교류와 정례회의체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상화 시기는 일본 측의 호응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 측은 한국과 국방 고위급 회의체 가동에 뚜렷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중단된 고위급 정책회의체를 복원하고자 지난해 일본 측과 한 차례 영상회의를 열었으나 이후 진전이 없었다. /연합뉴스

"윤 정부, 경제·민생대책 거꾸로"

이재명 "자본시장 투명성 확보"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이날 자본시장 현장을 점검한다는 취지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 등을 두고 "초대기업 감세 정책, 서민 지원 축소 등을 보면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문은 "경제, 민생의 위기는 결국 양극화와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측면이 강하다"라며 "위기가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위기를 기회로 원인을 심화시키겠다는 것이 청개구리, 그중에서도 '빨간색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같은 언급은 대선에서 경쟁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판함으로써 제1야당 유력 당권주자로서의 선명성을 부각하고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고문은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에 노력하기보다 방치하는 태도를 취해 소액투자자에게까지 막대한 피해가 갔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10조원 넘는 펀드를 조성해놓고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 검토만 하는 것도 매우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 고문은 거래소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매도 자체가 형평성 있게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소독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